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접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때



김홍갑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이사

한국의 산업현장은 외환위기(IMF) 이후 빠르게 변화했다.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는 자동화, 모듈화를 통한 대량생산 방식이 도입되었고, 석유화학, 철강 등의 중화학 부문에는 설비 자동화가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자본은 최근 들어 이러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보다 빠른 시일 내로 대부분의 산업현장에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지난 2016년, 맥킨지(McKinsey)에서 발표한 '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The technical potential for automation in the US)'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광업 등 육체노동업종의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시간은 전체에서 7~25%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망사고 470명 중 25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5~49인의 사업장에서만 20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사망자의 43.8%를 차지하는 수치다.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건설업에서는 외려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제조업에서는 질병사망자가 27명 감소한 반면 건설업에서는 7명이 증가하였고, 질병재해자도 257명이 증가하여 건설업에서 질병사망자·질병재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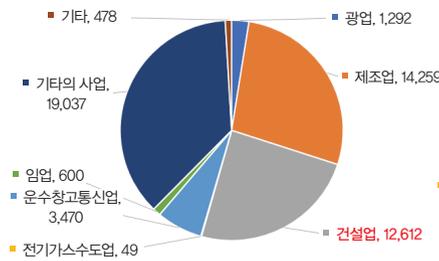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망사고 470명 중 25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5~49인의 사업장에서만 20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사망자의 43.8%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율의 감소는 정체되고 있다. 건설업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때이다.

〈2020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명

2020년 상반기 업종별 재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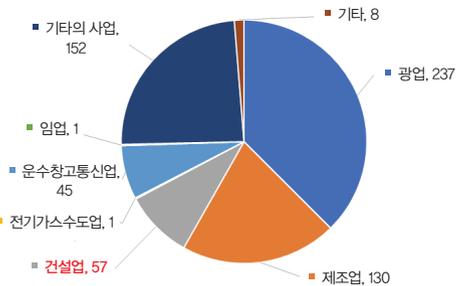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업종별 사망자



2020년 상반기 업종별 질병자



2020년 상반기 업종별 질병사망자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 6월 말 기준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건축물은 계획·설계·시공의 생산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선행 단계의 결함이 후행 단계의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선행 단계에서 발생된 위험을 후행 단계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공 이전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선진국에서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건축법제의 전반적 운영을 처음부터 주도하면서 일원적으로 지휘해 나가는 하향식(Top down)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달리 건축자재 및 건설 기술 산업안전보건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 등을 참고하여 이를 규범화 시킨다. 이후 연방, 각 주 및 지방정부 등이 승인해 가는 상향식(Bottom up) 또는 탈 중앙식(Decentralized)의 방식을 취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계획·설계·시공의 생산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선행 단계의 결함이 후행 단계의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선행 단계에서 발생된 위험을 후행 단계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공 이전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각종 자재나 건축물의 유형, 화재, 산업보건 등 건축안전보건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는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이 담긴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각종 자재나 건축물의 유형, 화재, 산업보건 등 건축안전보건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는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이 담긴 법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민간영역이 축적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법제화하고 있다.



법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민간영역이 축적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안전보건 관련 법제 규정은 반복되는 위임 등을 통해 내용의 구체성·명확성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선진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례를 교훈삼아 학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한 건설 시공사는 '건설 노동자는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라는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기존 현장에 머물러 있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